

도의회 예결특위, 도 추경예산안 심사

도, 7조530억원 규모 의회 제출... 생활SOC사업 중심 확장적 재정지출 경제활력 역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 익산)는 15일부터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전북도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7조 530억 원(본예산 대비 5,147억 원 증가, 7.3%↑)의 규모로 지난 3월 2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조 9,988억 원(본예산 대비 4,747억 원 증가, 8%↑), 특별회계가 6,185억 원(본예산 대비 234억 원 증가, 3.9%↑), 기금은 재정안정화 기금의 신설로 8,889억 원(본예산 대비 400억 원 증가, 4.8%↑) 규모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사업과 미세먼지 해소대책 등 생활 SOC 사업 중심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경제 활력에 역점을 두고, 소방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비 반영, 대형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재정안정화 기금을 도입, 지역개발기금 조 기상환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신규 및 증액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의 적정성, 본예산 삭감사업의 경우 삭감 사유 해소여부, 투자심사, 보조금 심

의 등 사전절차의 이행여부, 타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을 꼼꼼히 심사할 예정이다.

김대오 위원장(익산)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저를 비롯한 제11대 제1기 예결위원들은 군산의 고용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실직근로자의 재취업 기회 확보와 생활안정, 신산업 및 대체산업 육성, 청년들의 타시도 이주 등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생활안전 대책 등 도민의 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했다"며, "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

에서 현장에서 청취한 도민의 목소리가 완전히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남비성 소모성 예산은 철저히 심사하여 삭감하되, 꼭 필요한 예산은 빠짐없이 편성하도록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전라북도와 소통하면서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11대 전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부터 임기를 개시해 활동중이며, 오는 5월에는 전라북도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6월에는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우리가 평화 주도"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 '오지랖 넓은 중재자' 발언에 국제 사회 여건 내에서 '당사자 역할 중' 강조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말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응답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하고 있으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 관계의 발전과 북미 관계의 개선을 촉진하는 역할을 모두 맡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필요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 강화 등 한반도 평화 질서를 만드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북미 정상회담 재개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서로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며 "북한의 행태가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뉴시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15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황교안 등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책임자 수사를"

세월호 유가족들 "100분간 대기 지시 내려 304명 희생돼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아... 신속하게 수사해야" 주장

세월호 유가족이 5년 전 참사의 정부 책임자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지목하고 수사를 거쳐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연대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구조 가능했던 1시간40분 동안 대기 지시로 퇴선을 막아 사고를 참사로 만든 국가 범죄사실에 대한 왜곡과 은폐는 더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국민생명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선형 조치는 바로 책임자 처벌과 엄단에서 비롯된다는 사명감으로 1차 명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참사 이후 1826일째가 되는 날인데 그날에 돌아가신 분들은 있지만 그 분들을 돌아가시게 한 자들은 없다"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며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이야기가기 때문에 멈출 수 없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인순호 4·16연대 상임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 수장으로서 세월호 전복 8시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으로 나타나 한 말이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발견하기 힘들니까'였다"며 "박근혜야말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헌법상 국민 생명권과 국민 행복권을 유린한 책임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당시 청와대 민적 수사실 비서관이었던 우병우는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막으려 했고, 해경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해경은 해양수산부 소속 부처로 구조하지 않은 중요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이주영씨도 처벌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직권을 이용해 검찰 수사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빠라'고 지시해 2016년 박영수 특검과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2차례 고발했다"며 "또 범죄 은닉 교사에 불응한 광주지검 수사팀을 보복인사 조치해 권력남용한 혐의와 국무총리 시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박근혜 7시간 관련 기록물을 봉인한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이날 연대는 ▲당시 청와대 ▲김석근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성명불상의 해양경찰청 상황실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목포해양 경찰서장 ▲목포해양 경찰서 상황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김정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해양수산부 직원 ▲김병철 기무서장 ▲조준주 ▲소강원 기무서장 ▲남재준 국정원장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 등 총 18명의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을 1차 발표했다.

연대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시효는 각각 5년과 7년이다. 이에 따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속도를 올리고, 수사와 기소에 대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연대는 설명했다.

연대는 추후 300명에 달하는 책임자에 대한 혐의점을 확인한 뒤 2, 3차 추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조배숙 의원, 소상공인 보호·지원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전체 소상공인의 30%, 10명 중 3명의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201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연구) 속에 그동안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유명 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은 15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상담센터의 업무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명시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



단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2016년 2월부터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의 예산, 역할, 활동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16년, 2017년 각각 4억에 불과했고, 동 예산에 전문가 상담비용, 홍보, 실태조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등 현재까지도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시간과 정보, 경제력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매칭 돼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의 절차와 대응방법들을 상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정원 분쟁조정 출석 시 대리인(변호사)이 대신 출석하여 조정도 가능하다.

조배숙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데 그 역할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